

인천광역시 중구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결	기 관 의 장



제 1392 호

2024년 1월 2일 화요일

차 례

조 례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58호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	3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59호 (인천광역시 중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60호 (인천광역시 중구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11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61호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16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62호 (인천광역시 중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27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63호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30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64호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3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65호 (인천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38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66호 (인천광역시 중구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1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67호 (인천광역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44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68호 (인천광역시 중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48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69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51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중구

편집 : 홍보체육실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70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4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71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58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72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64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73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1

훈 령

○인천광역시중구훈령 제413호 (인천광역시중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	74
--	----

고 시

○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24-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84
○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24-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85
○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24-3호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	86

고 시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24-1호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87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24-2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89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24-3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91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24-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93

조 례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제1조 ~ 제2조)

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제3조)

다.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전검토 절차(제5조)

라. 지능정보화 교육에 관한 규정(제8조)

마. 정보격차의 해소 및 접근성 보장에 관한 규정(제9조 ~ 제10조)

바. 「인천광역시 중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부칙 제2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현

2024년 1월 2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58호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능정보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부서”란 지능정보화 사업의 기획·정보자원관리·보안 등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사업부서”란 지능정보화 사업을 시행하는 실·과 또는 소속 행정기관으로서 지능정보화 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3. “지역지능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자정부법」 및 그 밖에 정보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 정책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4. 지능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8.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9.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정보화 부서의 장을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으로 둔다.

제5조(지능정보화 사업의 사전검토)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검토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지능정보화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전검토 결과를 예산을 주관하는 부서 및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예산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⑤ 사업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지능정보화 사업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의 역사, 문화, 복지, 환경 등의 지역정보서비스 개발과 보급
2. 정보시스템 구축 및 지역의 정보화기반 조성
3. 정보화 낙후지역의 집중 지원
4. 정보시스템 및 정보서비스의 통합관리 등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5. 그 밖에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구청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를 통한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방지와 그 밖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민간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정보격차의 해소) 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보호)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모든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구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사유

누구나 물리적·사회적 장벽 없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관광권 향유 기회의 확대 및 관광의 질적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제3조)
- 다.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제4조)
- 라.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제5조)
- 마. 재정지원(제6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현

2024년 1월 2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59호

인천광역시 중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누구나 물리적·사회적 장벽 없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권 향유 기회의 확대 및 관광의 질적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해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편의성 증진
3. 무장애관광 환경 콘텐츠 발굴 및 관광 정보 접근성 제고
4.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자원 확보와 운용 방안
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3. 무장애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
4.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
5.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정사유

다양한 산업과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성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마이스(MICE)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개최 지원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제3조)

다.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제4조)

라.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제5조)

마. 마이스행사 유치 및 활성화 지원(제6조)

바. 전문인력의 양성(제7조)

사.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의 해촉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제8조~제13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현

2024년 1월 2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60호

인천광역시 중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산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관광·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산업 및 이들을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2. “회의(Meeting)”란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협회·학회 회의, 정부기관 회의, 기업 회의 등을 말한다.
3. “포상관광(Incentive Travel)”이란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
4. “컨벤션(Convention)”이란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제2호의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
5. “전시회(Exhibition)”란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의 판매, 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무역전시회, 일반전시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마이스산업의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4. 지역 전략산업 및 역사·문화·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5.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발굴 및 확충방안
7.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5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행사 유치·발굴 또는 개최 지원
 2.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
 3.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4. 지역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 육성 지원
 5. 지역 역사·문화·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6. 국내·외 전시회 참가
 7. 마이스산업 인프라 확충 및 운영 지원
 8.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마이스행사 유치 및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개최되는 마이스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구립시설 등을 포함한 관내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과 민간시설의 대관지원 등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대규모 국제회의 및 인센티브 관광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행사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구청장은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내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의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기관, 단체 및 대학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민·관 인프라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 소관 국장
2. 위촉직 위원
 - 가.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 교수 및 전문가
 - 나. 마이스산업 기관·단체·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
 - 다.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 라.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 마. 그 밖에 마이스산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에게 자문에 관하여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시설의 대관 규정을 마련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 시설의 활성화를 도모

☐ 주요내용

가. 문화·관광 시설 대관 허가와 범위 (제10조)

- 소무의도 스토리움 : 3층 전시실
- 누들플랫폼 : 쿠키교실, 공유공간, 공유주방, 희망조리실

나. 문화·관광 시설의 대관 기준 (제11조 ~ 제15조)

- 대관 신청 방법
- 대관 허가의 제한, 변경, 취소 등
- 대관자 준수사항

다. 문화·관광 시설의 대관료 기준 (제16조, 제17조)

- 대관료 납부 및 반환
- 대관료 면제 등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현

2024년 1월 2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61호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가 설치하는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시설”이란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체험관, 홍보관, 전시장, 휴게쉼터, 전망대, 포토존 등으로 제3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제1호의 문화·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단체”란 유료로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이용시간) ① 문화·관광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매표 및 입장시간은 이용 시작시간부터 이용 종료시간 30분 전 까지로 한다.

제5조(휴관일) ① 문화·관광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연휴(설날 전날, 설날 당일, 설날 다음날), 추석 연휴(추석 전날,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
2. 매주 월요일(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를 제외한 공휴일이 월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문화·관광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이용료 및 이용권 발급) ① 문화·관광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②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관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 ④ 이용권은 청소년, 군인 및 성인의 개인이용권과 단체이용권으로 각각 구분하여 발급한다.
- ⑤ 구청장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권을 예약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전문적인 판매대행 사업자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람
5.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관련자 1명을 포함한다)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사람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3. 「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4.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15. 학술연구 목적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6. 12세 이하의 어린이

1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별표 3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구민(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구립박물관을 이용한 사람

3. 제6조제5항에 따라 예약판매하는 이용권을 구입하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이용의 금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문화·관광시설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3세 미만의 영유아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문화·관광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음주

2. 문화·관광시설 시설물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4. 큰 소리를 내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식

6. 그 밖에 이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요구 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대관의 허가과 범위) ① 구청장은 문화·관광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관광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1. 지역 문화 발전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활동, 전시회, 그 밖의 공연 등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관할 수 있는 문화·관광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소무의도 스토리움: 3층 전시실

2. 누들플랫폼

가. 2층: 쿠킹교실, 공유공간

나. 3층: 공유주방, 희망조리실, 강의실

제11조(대관허가 등) ① 문화·관광시설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대관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대관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관광시설의 업무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승인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대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문화·관광시설의 운영 방향과 부합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성, 공익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우선 이용을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⑤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대관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관시설을 훼손하고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대관조건을 위반하거나 대관허가 후 대관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대관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정치적인 행위 또는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관광 발전과 관광객 유치, 문화·관광시설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대관허가의 변경) 구청장은 문화·관광시설의 운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대관된 시설의 대관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대관허가의 취소 및 사용정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대관내용과 상이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대관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5.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구청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대관자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문화·관광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대관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②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대관료 납부 및 반환) ① 제10조에 따라 대관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4에 규정한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대관료를 이미 납부한 자가 대관일 1일전까지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구청장은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대관일이 경과한 후에 미사용에 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③ 천재지변 등 대관자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대관료를 전액 반환한다.

제17조(대관료 면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공익 관련 행사
2. 제20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3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관광시설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8조(손해배상) 이용자가 문화·관광시설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오손 한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19조(편의시설 등) 구청장은 문화·관광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매점(자동판매기를 포함한다)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0조(관리 운영) ① 문화·관광시설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에게 위탁하거나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시설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관광사업자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에게 월미관광특구 내의 관광객 유치 사업, 관광상품 개발사업 등 중구의 관광 진흥을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문화·관광시설을 사용·수익 허가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계약할 수 있다.

제2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화·관광시설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시 설 명	위 치	비고
동화마을 트릭아트스토리	인천광역시 중구 동화마을길 42	—
해양광장 입체영상관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36	—
월드커뮤니티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232번길 26	—
어울미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377-1	—
소무의도 스토리움	인천광역시 중구 폐무리길 15	—
누들플랫폼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36	—

[별표 2]

문화·관광시설 이용료(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이 용 료(1명 기준)			비고
		성 인 (19세 이상)	청소년 (13세 ~ 18세)	군 인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포함)	
동화마을 트릭아트 스 토 리	개인	6,000원	4,000원	4,000원	
	단체	4,000원	3,000원	3,000원	
해양광장 체 영 상 관	개인	3,000원	2,000원	2,000원	
	단체	2,500원	1,500원	1,500원	

※ 이용자는 이용료의 구분에 필요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별표 3]

문화·관광시설 이용료의 감경 기준(제7조제3항 관련)

구분	금 액	비고
동화마을 트릭아트 스 토 리	구민: 50퍼센트 감경 구립박물관을 이용한 경우: 1,000원 감경 예약판매하는 이용권을 구입하는 경우 : 4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감경	※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음

※ 감경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증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예약판매하는 이용권을 구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별표 4]

문화·관광시설 대관료 기준(제16조제1항 관련)

구분	시설명(규모)	기준	대관료	비고
소무의도 스토리움	3층 전시실 (150.79㎡)	1일	60,000원	
누들 플랫폼	2층 공유공간 (89.4㎡)	1시간	5,000원	
	2층 쿠킹교실 (76.5㎡)	1시간	5,000원	
	3층 공유주방 (58.1㎡)	1시간	8,000원	
	3층 희망조리실 (88.5㎡)	1시간	8,000원	
	3층 강의실 (46.2㎡)	1시간	3,000원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 제정사유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나. 적용대상 및 구청장의 책무(제3조~제4조)

다.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제5조)

라.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제6조)

마. 위탁 및 재정지원(제7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현

2024년 1월 2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62호

인천광역시 중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지원
3. 이동노동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4.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이동노동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휴식, 대기 및 소통 공간 제공
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서비스 제공
3. 문화 활동 및 교육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중구 청년의 이사비용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청년 주거비용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사비지원 근거 마련(제9조제1항제4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현

2024년 1월 2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63호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청년 주거 및 생활안정지원(이사비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청년정책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4. <u>청년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u> 5. ~ 9. (생략) ② (생략)	제9조(청년정책 사업)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청년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u> <u>(이사비 지원)</u> 5.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가. 영종·용유지역 내 등록된 전통시장은 전무하며 등록된 상점가는 1개소인 상황으로, 지역 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부족으로 인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골목형상점가 발굴이 필요함

나.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는 지역 특성상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규모가 큰 시설들이 다수 분포한 영종국제도시와 용유지역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도지역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구체화(제2조제1항)

나. 영종·용유지역 내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제2조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현

2024년 1월 2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64호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을 “다음 각 목의 밀집 기준을 충족한”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상업지역 : 30개 이상 밀집

나. 상업 외 지역 : 25개 이상 밀집

다.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 :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 영종·용유지역 : 20개 이상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면적당 점포 수(제2조제3항 관련)

구 분	기본			1.5배			2배			n배		
	상업지역	상업 외 지역	영종· 용유지역	상업지역	상업 외 지역	영종· 용유지역	상업지역	상업 외 지역	영종· 용유지역	상업지역	상업 외 지역	영종· 용유지역
면 적	2,000㎡			3,000㎡			4,000㎡			2,000㎡×n		
점포수	30개 이상	25개 이상	20개 이상	45개 이상	38개 이상	30개 이상	60개 이상	50개 이상	40개 이상	30개×n이상	25개×n이상	20개×n이상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① ----- ----- -----.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u>30개 이상 밀집해 있는</u> 구역	1. ----- ----- ----- 다음 각 목의 밀집 기준을 충족한 -----
<신 설>	가. 상업지역 : 30개 이상 밀집
<신 설>	나. 상업 외 지역 : 25개 이상 밀집
<신 설>	다.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 :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 설>	라. 영종·용유지역 : 20개 이상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구별표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면적당 점포 수 (제2조제3항 관련)					[별표] 면적당 점포 수 (제2조제3항 관련)												
구분	기본	1.5배	2배	n배	구분	기 본			1.5배			2배			n배		
면적	2,000㎡	3,000㎡	4,000㎡	2,000㎡×n		상업지역	상업외지역	영종·용유지역	상업지역	상업외지역	영종·용유지역	상업지역	상업외지역	영종·용유지역	상업지역	상업외지역	영종·용유지역
점포 수	30개 이상	45개 이상	60개 이상	30개×n 이상	면적	2,000㎡			3,000㎡			4,000㎡			2,000㎡×n		
					점포 수	30개 이상	25개 이상	20개 이상	45개 이상	38개 이상	30개 이상	60개 이상	50개 이상	40개 이상	30개 이상	25개 이상	20개 이상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사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 나. 책무(제3조)
- 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계획의 수립·시행(제4조)
- 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제5조)
- 마. 협력체계 구축(제6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현

2024년 1월 2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65호

인천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 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구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작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인,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사유

- 가. 최근 기후위기 등 환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걷거나 뛰는 환경운동인 ‘쓰담달리기’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해변을 청소하는 ‘클린 비치’ 등 국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사회공헌 활동이 확산되고 있음.
- 나. 이에 구 차원에서 쓰담달리기 추진 및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환경보호운동에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 참여형 환경운동의 실천 기반을 마련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및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제3조)
- 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제4조)
- 라. 지원사업(제5조)
- 마. 협력체계 구축(제6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현

2024년 1월 2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66호

인천광역시 중구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환경운동의 실천 기반을 마련하고 인천광역시 중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쓰담달리기”란 가볍게 걷거나 달리며 주변의 쓰레기를 주위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쓰담달리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쓰담달리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
 4.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쓰담달리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
2. 교육 및 홍보·안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경비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쓰담달리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정사유

의류수거함의 불법 설치 및 관리 부재로 도시미관이 저해되어 체계적인 관리·운영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목적(제1조)
- 나. 이 조례에 적용되는 의류수거함의 범위(제2조)
- 다.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제3조 ~ 제5조)
- 라.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기준(제6조)
- 마. 의류수거함 관리자의 업무 및 준수사항(제7조, 제8조)
- 바. 의류수거함 설치 기준(제9조)
- 사. 의류수거함 강제 철거 기준(제10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현

2024년 1월 2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67호

인천광역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and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운영하는 의류수거함 전부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의류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의류 재활용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폐의류 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
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의류수거함의 관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과 사업자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관리) 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의류수거함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관리자 지정을 통한 수거함 운영·관리 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된 관리자에 대하여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운영·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7조(관리자 업무 등) ① 제6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이행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게 위하여 의류수거함 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자 준수사항) ①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②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에 관리주체를 명확히 표기한 관리번호 및 배출가능 품목 안내문을 부착하고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③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를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 ④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의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신규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 ⑤ 관리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원을 발생하면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제9조(설치기준) ① 관리자는 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총량을 정하며, 총량의 범위에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의류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할 수 없다.

1. 학교 주변 통학로 50미터 이내 및 공원·녹지지역 내
2. 교차로(교차접속 또는 굴곡되는 부분) 등에 위치하여 차량 운전 및 차량 흐름 파악에 방해가 되는 곳
3. 2차로 이상 및 폭 15미터 이상 도로변
4. 의류수거함 간 보행자 최단거리 50미터 이내
5. 도로변, 안전상 사고 우려 지역,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6.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이나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수거함 설치장소로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④ 수거함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인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의류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형태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강제철거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자에게 의류수거함을 철거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즉시 철거 또는 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5항을 이행하지 않는 의류수거함
2.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 승인을 받지 않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의류수거함
3. 제9조제3항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된 의류수거함
4. 제9조제5항의 규격 등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의류수거함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류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1. 관리자자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관리자 외 의류수거함을 무단 설치하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사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해안에서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수거·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나. 책무(제3조)

다. 시행계획 수립 등(제4조)

라. 실태조사(제5조)

마. 바다환경지킴이(제6조)

바.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제7조)

사. 협력 등(제8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현

2024년 1월 2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68호

인천광역시 중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해안에서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수거·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쓰레기”란 고의 또는 부주의로 해안에 방치되거나 해양으로 유입·배출되어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형물을 말한다.
2. “바다환경지킴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해안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와 투기행위를 감시하는 등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해양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 중구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처리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수거·처리
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4.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지원
5.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6.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 의식증진 및 시민참여
7.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쓰레기의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바다환경지킴이) ① 구청장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① 구청장은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사업
 2.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
 3.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의 설치·운영
 4.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시설 및 장비의 구입·운영
 5. 해양쓰레기 발생 방지 등을 위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 등)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의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행정기본법」일부개정(2022.12.27. 공포, 2023.6.28.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맞게 나이 관련 자치법규를 현행화하고 오류사항을 정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나이에서 “만” 표시 삭제(제15조)

나. 오류 정정을 위한 항 번호 정비(제 15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현

2024년 1월 2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69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만 5세”를 “5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특별휴가) ① (생략)	제15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만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② 5세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⑧·⑨ (생략)	⑦·⑧ (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같음)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도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연구단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연구 활동 지원 등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 및 투명성·활용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내·외부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 신설(제6조의2)
- 나.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시 용역보고서 제출 규정 보완 및 결과 보고서 등 홈페이지 공개 조항 신설(제12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현

2024년 1월 2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70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성별을 고려하여”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의장은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제2항 중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예산 사용내역서 및 용역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장은 연구활동 보고서 및 용역보고서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3조 중 “연구결과 종료 시”를 “연구결과보고서가 승인된 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연구단체 심의위원회)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u>성별을 고려하여</u>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③ ~ ⑥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6조(연구단체 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u> ----- -----.</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⑦ 의장은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p> <p>제6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p> <p>1. <u>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u></p> <p>2. <u>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p> <p>3. <u>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u></p> <p>② <u>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u></p>
<p>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생략)</p> <p>② 연구활동 <u>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u> 첨부하여야 한다.</p>	<p>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예산 사용내역서 및 용역보고서</u> -----.</p>

현행	개정안
<p>③ (생략)</p> <p><u><신설></u></p> <p>제13조(연구단체 해산) 연구단체는 <u>연구결과 종료 시</u> 또는 의원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해산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의장은 <u>연구활동 보고서 및 용역보고서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u></p> <p>제13조(연구단체 해산) ----- <u>연구결과 보고서가 승인된 때</u> ----- -----.</p>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 제정사유

- 가. 「지방자치법」 개정(2023. 9. 22.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 나. 인천광역시 중구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업무수행 역량 등을 검증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이 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
- 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인사청문회(제3조, 제4조)
- 다. 인사청문 첨부서류(제5조)
- 라. 인사청문 회부 등(제6조)
- 마. 위원회 질의 등(제7조)
- 바. 증인 등의 출석요구(제8조)
- 사. 위원회의 활동기간 등(제9조)
- 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및 위원장의 보고(제10조, 제11조)
- 자. 자료제출 요구(제12조)
- 차. 인사청문회의 공개(제13조)
- 카.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및 답변 등의 거부(제14조, 제15조)
- 타. 제척과 회피 및 주의 의무(제16조, 제17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현

2024년 1월 2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71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인사청문회의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이란 인사청문 대상자의 전문성, 직무수행능력, 도덕성, 준법성, 공직자로서의 자질 등에 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3. “인사청문요청안”이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선임한다.
- 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서로 뽑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 ⑥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 ⑦ 위원회가 인사청문회에 사무보조가 필요할 때에는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4조(인사청문회)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듣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인사청문 첨부서류) 구청장은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 시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6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구청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冒頭) 발언을 청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의요지서를 지체 없이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⑦ 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해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0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안이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심사 및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3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증인·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5조(답변 등의 거부)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대상자는 거부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6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 및 제3조제7항의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준용규정)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검직신고 내용 공개 방법을 명시하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를 징계 대상 행위에 추가하여 그에 따른 합당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검직신고 안내 및 내용 공개 방법 명시(제7조제5항 ~ 제6항)
- 나. 징계 대상 위반행위 확대(제11조제3호 ~ 제5호)
- 다. 징계 대상 유형별 징계기준 추가(별표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현

2024년 1월 2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72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의장은 검직 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검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 ⑥ 의장은 검직신고 사항을 연 1회 이상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1. 법 제43조에 따른 검직신고, 검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영리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95조 및 제96조 등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의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 계 기 준(제11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거래금지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품위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취소 - 면허정지 ○ 범법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 미만 확정판결 ○ 각종 비리 관련 범죄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리행위로 인한 벌금 이하 확정판결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4. 청렴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세 ○ 면탈 ○ 금품수수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회피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6. 모욕 등 발언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중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 ○ 회의 중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7. 발언 방해 등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중 폭력 행사 ○ 회의 중 소란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壇)이나 단상(壇上)에 올라가는 행위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8. 직무 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 의정활동 관련 찬조금 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9.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예산의 목적 외 용도 사용 ○ 업무추진비 등	공개사과
10.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	공개사과
11. 회의 불참	○ 회기당 3회 이상	경고, 공개사과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검직신고) ① ~ ③ (생략) ④ 삭제 <신설> <신설>	제7조(검직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은 검직 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검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검직신고 사항을 연 1회 이상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1. 검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검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구와 계약 체결 6. 관리인 등 검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 거부	제11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1. 법 제43조에 따른 검직신고, 검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영리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품위유지, 청렴 의무, 회피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95조 및 제96조 등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의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신 · 구별표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징계기준(제11조 관련)			[별표 1] 징계기준(제11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검직신고 위반	○ 검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검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검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1. 검직신고 위반	○ 검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검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검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 관리인 검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 관리인 검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 면허정지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 각종 비리 관련 범죄행위 - 비리행위로 인한 벌금 이하 확정판결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4. 청렴의무	○ 탈세 ○ 면탈 ○ 금품수수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회피의무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현행	행	개정안																					
		<table><tr><th>비위의 유형</th><th>비위의 정도</th><th>적용기준</th></tr><tr><td>6. 모욕 등 발언의 금지</td><td>○ 회의 중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 ○ 회의 중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td><td>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td></tr><tr><td>7. 발언 방해 등의 금지</td><td>○ 회의 중 폭력 행사 ○ 회의 중 소란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 ○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壇)이나 단상(壇上)에 올라가는 행위 ○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td><td>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td></tr><tr><td>8. 직무 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td><td>○ 의정활동 관련 찬조금 수수</td><td>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td></tr><tr><td>9.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td><td>○ 예산의 목적 외 용도 사용 ○ 업무추진비 등</td><td>공개사과</td></tr><tr><td>10. 업무추진비</td><td>○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td><td>공개사과</td></tr><tr><td>11. 회의 불참</td><td>○ 회기당 3회 이상</td><td>경고, 공개사과</td></tr></table>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6. 모욕 등 발언의 금지	○ 회의 중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 ○ 회의 중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7. 발언 방해 등의 금지	○ 회의 중 폭력 행사 ○ 회의 중 소란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 ○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壇)이나 단상(壇上)에 올라가는 행위 ○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8. 직무 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	○ 의정활동 관련 찬조금 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9.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예산의 목적 외 용도 사용 ○ 업무추진비 등	공개사과	10.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	공개사과	11. 회의 불참	○ 회기당 3회 이상	경고, 공개사과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6. 모욕 등 발언의 금지	○ 회의 중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 ○ 회의 중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7. 발언 방해 등의 금지	○ 회의 중 폭력 행사 ○ 회의 중 소란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 ○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壇)이나 단상(壇上)에 올라가는 행위 ○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8. 직무 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	○ 의정활동 관련 찬조금 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9.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예산의 목적 외 용도 사용 ○ 업무추진비 등	공개사과																					
10.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	공개사과																					
11. 회의 불참	○ 회기당 3회 이상	경고, 공개사과																					

☐ 제 명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조치 사항을 반영하여, 출석정지 및 질서유지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사과 징계와 관련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 추가(제6조제2항 ~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현

2024년 1월 2일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1673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생략)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p>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설>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훈 령

☐ 제 명 : 인천광역시중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

☐ 제정사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의 상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인천광역시중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나. 규정의 목적, 용어 정의,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임무에 필요한 사항

(제1조 ~ 제3조)

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근무반 편성, 근무시간 및 복무, 상황보고 및 전파, 보고의 종류 및 방법과 협조체계 규정(제5조 ~ 제10조)

라. 각종 문서의 기록 및 관리, 장비 관리, 보안에 관한 사항(제11조 ~ 제15조)

마. 상황실 근무자 인사 관리 및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제16조 ~ 제19조)

바. 별표 및 별지 서식 정비(별표 제1호, 별지 제1호 ~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정 현

2024년 1월 2일

인천광역시 중구 훈령 제413호

인천광역시중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중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상황관리”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종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재난안전시스템”이란 재난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재난에 관한 관제, 예보, 경보, 전파에 필요한 국가 재난관리시스템(NDMS) 및 재난안전통신망 등 시설·장비 일체를 말한다.

제2장 설치 및 임무

제3조(설치 및 임무) ① 각종 재난 정보의 수집·전파, 초동보고,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둔다.

② 상황실은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안전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과 상황근무자로 구성하고 상황실장은 재난 총괄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휴일 및 야간에는 당직사령을 상황실장으로 할 수 있다.

③ 상황실장과 상황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상황실장

가. 상황실 업무 총괄

나. 주요 간부 및 상급기관 등에 상황보고 및 전파

다. 각종 재난상황 판단 및 지휘

라. 유관 기관·단체와 협조지원체계 확립 및 유지

2. 상황근무자

가. 재난상황의 신고 접수, 판단, 보고 및 신속 전파

나.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및 재난안전통신망 등 재난안전시스템 운영

다. 재난안전시스템, CCTV 및 언론보도 상시 모니터링

라. 재난안전 일일 상황 보고서 작성

마. 주요 재난상황 정보 파악 및 분석

바. 주요 재난 발생 시 관계 부서 직원의 비상소집 등 필요한 조치

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사고 수습 부서·기관과 긴밀한 협조·지원

아. 그 밖에 재난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상황실 운영 및 복무

제4조(지휘 및 복무감독) ① 재난 총괄 부서의 장은 상황실을 지휘·감독한다.

②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업무 및 복무사항을 관장한다.

제5조(상황실 운영) 상황실은 연중무휴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제6조(상황실 근무반 편성) ① 제3조의 임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상황실 근무반(이하 “근무반”이라 한다)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반은 1명 이상 3개조 3교대로 편성·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교대 횟수 및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명절, 연말연시 등 연휴기간 비상근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등

3. 상황근무자가 휴가 또는 교육훈련 중인 경우
4. 그 밖에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근무시간 및 복무) ① 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근무: 09:00부터 18:00까지
2. 야간근무: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 ② 상황근무자는 근무개시 10분 전에 출근하여 전 상황근무자와 함께 합동근무를 하면서 재난관리상황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 ③ 상황근무자는 재난상황 근무 이외의 근무에서 제외한다.
- ④ 상황근무자는 별표 1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상황보고 및 전파

제8조(상황보고 및 전파) 상황실장은 주요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하고, 상급기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 기관, 관계 부서 등에 그 사실을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의 종류 및 방법) ① 재난상황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보고: 매일 1회 작성하는 재난안전 일일 상황보고(별지 제1호서식)
2. 수시보고: 재난의 중요성 등에 따라 긴급한 보고가 필요할 경우 수시로 하는 보고(별지 제2호서식)
- ② 각종 상황보고의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하되, 상황에 따라 서면, 구두, 전화, 모사전송(FAX),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 ③ 상황실장은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조치 후보고를 할 수 있다.

제10조(협조체계) ① 상황실장은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하는 유관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상황실장은 재난대비 유관 기관 협력체계를 수시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기록유지 및 장비관리

제11조(기록 및 관리) ① 상황실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상황실 근무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 상황실장은 주요 재난 수습상황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③ 상황실장은 재난상황보고·전파체계도, 유관 기관과 군·구 재난안전상황실 연락처, 별표의 근무수칙, 주요 재난 관련 매뉴얼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장비관리)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및 장비의 관리를 총괄하며, 상황실 운영을 위한 재난안전시스템 및 영상회의시스템 등 연계장비와 통신회선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제1항에 의한 점검 결과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보안관리

제13조(문서 및 장비보안) 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물품 및 장비 등은 상황실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제14조(보안관리) 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상황실의 각종 시스템 및 시설에 대하여 정보통신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상황실 출입제한)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 및 재난안전 업무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7장 인사 및 근무환경 등

제16조(결원보충) 상황실 근무인력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상황관리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훈련) 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에 대하여 상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징계) 상황실장은 제7조를 위반한 경우 경고조치를 하여야 하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근무환경 조성) ① 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가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 내의 각종 통신·장비 등이 항상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상황근무자 근무수칙

- 상황실 근무자는 이 수칙을 정확히 알고 지켜야 한다 -

1. 지휘계통과 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근무한다.
2. 준수사항
 - 가. 지정 근무시간 10분 전에 도착, 상황 인수·인계
 - 상황근무자는 10분 전에 상황실에 도착, 상황실장에게 근무신고 후 전 근무자로부터 상황을 인계받아 근무
 - 전 근무자는 보고체계에 의한 보고 및 다음 근무자에게 모든 상황을 인계 하고 상황실장에게 신고 후 퇴근
3. 보고서 작성기준
 - 가. 정기: 일일상황보고서(07시 기준) 작성
 - 나. 수시: 재난상황 진전에 따라 수시 보고서 작성
4. 상황보고 및 전파
 - 가. 구청장·부구청장에게는 상황실장이 보고
 - 나. 상급기관 및 관계 기관에 상황전파시스템, 유선, FAX 등을 활용하여 전파
 - 다. 주요재난 발생 등 긴급사안인 경우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
5. 상황실 장비 등을 수시 점검·확인하고, 교대 시에는 상황 및 각종 비품의 인계·인수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6. 유관 기관 및 인천시, 군·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7. 상황실장의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
8. 근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9. 상황실은 상황근무자 및 재난안전 관련 업무 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한다.
10. 재난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상황실장(상황에 따라 과·국장 등)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부서)에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재난안전 일일 상황보고

0000년 00월 00일(0요일) 07:00

인천 중구
재난 안전
상황실
(☎ 0000)

기상개황

구 분	일 자	기 상 내 용	기온(℃)	특 이 사 항
오늘	00.00()			
내일	00.00()			

○ 중기 기상전망

구 분	00(수)	00(목)	00(금)	00(토)	00(일)	00(월)	00(화)	00(수)
오전								
오후								
기온(저/고,℃)								

재난안전 상황관리 현황

○ 재난안전사고

구 분	화 재	산 불	붕 괴	폭 발	해 난	지 진	기 타
00건							

○ 메시지 처리

구분	계 (건)	NDMS			FAX						기타
		중재대본	행정안전부	인천시	행정안전부	인천시	소방부	해경	양찰	기 타	
계											
접수											
발송											

※ 접수 · 발송:

재난안전 주요 활동 상황

부 서	제 목	내 용	비고

주요 재난 안전사고 현황

유 형	발생 개요	피해 사항	비고

재난안전 관련 주요 언론보도

언론사	주요 보도 내용	비고

※ 상기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재난상황 보고서

0000.00.00.() 00:00

보고자	○○○○과장 △△△(☎0000) / ○○○○팀장 △△△(☎0000) / 담당자 △△△(☎0000)
제 목	

1. 일시:

2. 장소:

3. 상황 개요(사고 원인)

4. 피해상황

가. 인명피해: 명(사망: , 실종: , 부상:)

※ 별첨: 사망자·실종자 인적 사항

나. 재산피해

다.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 사항

가. 조치사항

나. 동원사항

- 인력: 명(민간인: , 군인: , 경찰관: , 소방공무원: , 공무원:)

- 장비: 대()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 전망 및 대책

작성 방법

1. 사망자·실종자 인적사항은 붙임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⑤란부터 ⑦란까지는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일지

문서번호		결 재	담 당	과 장
근무일시				
기상개황				
근 무 자				

상황근무자 및 점검(보고) 사항 *야간 근무시에만 작성

구 분	받는 사람	이상유무	구 분	받는 사람	이상유무
제1청			제2청		

재난 상황접수 및 처리결과

상 황 접 수			처 리 결 과	
접수일시	방법	내 용	방법	내 용

교육훈련	교육, 훈련 실시 현황 작성
장비점검	장비 점검 현황 작성
특이사항	기상특보, 비상 근무 발령 등 특이사항 작성

고 시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4-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7항 및 시행령 제20조 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내역

승인번호	승 인 일	공사 내용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제2023-10호	2023.12.26.	하나개해수욕장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문화관광과)	2023.12.26. ~ 2023.12.31.

2024년 1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4-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고,
같은 법 제8조 제6항과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내역

허가번호	허가일	위치	면적(㎡)	목적	피허가자 (성명 및 주소)	기 간
제2023-33호	2023.12.22.	인천 중구 운남동 산190번지 공유수면	1.3㎡	하수관 매설 및 사용	임홍순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	2023.03.09. ~ 2028.03.08.

2024년 1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4-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하고, 같은 법 제8조 제6항과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내역

허가번호	허가일	위치	면적(㎡)	목적	피허가자 (성명 및 주소)	기간
제2023-34호	2023.12.28.	인천 중구 덕교동 671-8번지 외 3필지 인근 공유수면	770	파라솔 및 의자 설치	김희승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196번길)	2024.1.1. ~ 2024.12.31.
제2023-35호	2023.12.28.	인천 중구 무의동 산189번지 인근 공유수면	112	포내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객 대기실 및 물품 보관소 운영	포내어촌계장 강종구 (인천광역시 중구 하나개로)	2024.1.16. ~ 2025.1.15.
제2023-36호	2023.12.28.	인천 중구 덕교동 662-6번지 외 3필지 인근 공유수면	1,285	마시안 갯벌체험장 관리시설 및 교육장 설치	마시안자율관리공동체 대표 김원수 (인천광역시 중구 마시란로)	2024.1.12. ~ 2025.1.11.

2024년 1월 2일

인천광역시중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1호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동물보호법」 제82조(교육)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 공고제목: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4. 1. 2. ~ 2024. 1. 17. (15일간)

☐ 공고대상자

순번	상호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행정처분내용	공시송달 사유
1	마당개 놀이터	노*분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로29번길 144-22(중산동)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기타
2	불리 갯스터	송*울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265번길 4 (운북동)	"	"
3	제시카 폼	김*현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241번길 4 (운남동)	"	"
4	콩이	김*현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228번길 45 (운북동)	"	"

☐ 공고사항

- 처분내용: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 처분내용: 2022년도 반려동물 영업자 정기교육 미이수
- 법적근거: 「동물보호법」 제82조,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4. 1. 2. ~ 2024. 1. 17. (15일간)
- 제 출 처: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안길 10, 3층 도시농업과 농업행정팀
- 제출방법: 방문, 서면(의견제출서)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지참)

☐ 기 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공고기간 내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 조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 감경은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도시농업과 농업행정팀(☎032-760-89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2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및 이의신청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처분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2.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제3항
3. 공시송달 대상자

순번	성명	주소	행정처분내용	공시송달 사유
1	전*인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254번길 100-1, 2동 202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폐문부재
2	이*상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254번길 100-1, 1동 401호		폐문부재
3	이*아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254번길 100-1, 1동 303호		폐문부재

4. 공고기간 : 2024. 01. 02. ~ 2024. 01. 17. (15일간)

5.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통지서 및 고지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인천광역시 중구 친환경위생과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친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032-760-76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3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처분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2.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제8조, 제6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3. 공고대상자

순번	성명	주소	행정처분내용	공시송달 사유
1	남*순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254번길 47-3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폐문부재

4. 공고기간 : 2024. 01. 02. ~ 2024. 01. 17. (15일간)

5. 공고사항

가. 「폐기물관리법」제8조 위반에 따른 쓰레기 불법투기 등 과태료 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청 친환경위생과(☎032-760-7698, FAX.032-760-6997)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다.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립니다.
-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공고기간 내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 조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 감경은 불가)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친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032-760-76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 완료 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2024. 1. 2.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582-4번지 ~ 운북동 581-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영종 중로1-651호선 보도확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연장(L) = 120m, 폭원(B) = 11.8 ~ 12.54m (보도조성)
(※ 도시계획시설 결정 연장 3,331m 중 금회 시행 120m)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김 병 유
-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 인천공항 1터미널 1765호)

5. 사업기간: 2023. 10. 13. ~ 2023. 12. 21.

